

전문가 10명 중 8명 “지방정부, 중앙정부에 의존·수직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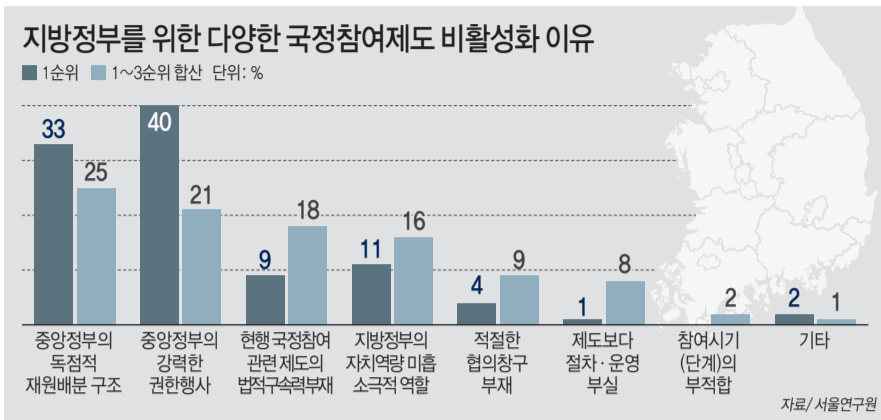
서울시 지방정부 국정참여 인식 조사
지방 자치역량 부족... 정책지원 원해
국책사업 추진때 공공 갈등 심화 예상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며 수직적인 관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6월 지방행정 관련 전문가 154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 응답자의 44%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이 부족해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적이며 정책 지원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 위상과 의사결정 과정이 여전히 감독과 통제 중심의 수직적 관계이다' (40%)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또 향후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체 응답자의 44%가 공공 갈등의 수준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40%로 집계됐다.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과 소통 수준이 국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83%가 '양 기관의 협력과 소통이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다만 현행 국정참여제도에서 지방정

부의 참여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국회 청원 및 공청회·청문회 의견진술, 입법에 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2.08점(5점 만점)으로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국 4대 지방협의체 활동,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회의장 협의회'는 참여정도가 2.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부의 행정부시장·부지사 합동회의' (2.78점),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사전평가제도' (2.73점) 순이었다.

지방정부를 위한 국정 참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행사' (40%)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앙정부의 독점적 재원배분 구조' (33%),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미흡과 소극적 역할' (11%), '현행 국정 참여 관련 제도의 법적 구속력 부재' (9%), '적절한 협의창구 부재' (4%)가 뒤를 이었다.

국책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주원인으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43%로 1위로 꼽혔다. 이어 '지역 이기주의와 지방정부의 소극적 역할' (23%),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이해 부족' (21%), '기득권 세력의 배려 부족' (10%) 순이었다.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공론화 위원회 운영 및 공론조사'가 44%로 가장 많았다. '법 국민합의기구 설치 및 운영' (38%), '시

민배심원제도 활용' (8%), '국민투표 실시' (5%)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10명 중 8명이 중앙정부 위주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제재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지원하는 입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한다' (80%)고 응답했다.

정희윤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현재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수준이나 기존 참여기제의 제도적 적정성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수행에 있어 중앙집권적 권한과 재정부조에 있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사업수행이 공공갈등을 일으킨다고 봤다"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이를 위해 현행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용산 상가 붕괴 1년... 정비구역 내 건축물 점검

서울시, 건축물 5만166동 조사
절반 이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지난해 6월 상가 건물 붕괴사고 이후 서울시가 용산 재개발 5구역 내 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용산 상가 붕괴사고 이후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건물 내부를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는 서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량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시는 특히 용산 국제빌딩 주변 5구역의 33개 동을 전수 조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17개 동을 유지·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지속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붕괴사고 후 해당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분쟁을 중재했다. 현재 건물붕괴 관련 건물주, 세입자 간 보상 합의가 완료된 상태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시공자선정 등



지난 2018년 6월 7일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정비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지난 4월 23일 일부 개정했다.

시는 올해 점검 대상을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 건축물로 확대했다. 자치구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로 신청하면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 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됐다"며 "서울엔 54만여 동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있다.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3000대 추가 보급

오늘부터 14일까지 조합·지부서 접수

서울시는 친환경 전기택시 30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서울 전기택시 보급 차량은 기아자동차(니로EV, 쏘울 부스터EV) 2종과 현대자동차(아이오닉EV, 코나EV) 2종 등 총 4종이다.

보급 차종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제안을 접수 받아 차량성능, 배터리 보증조건, 출고시기, 추가 프로모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4개 차종의 완전 충전 시 주행거리는 271~406km다. 가격은 4000만~5000

만원 선이다. 전기택시 대당 구입 보조금은 1800만원이다. 택시 전용을 구입하면 일반 차량에 비해 70만~100만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전기택시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6월 3일부터 6월 14일 오후 6시까지 양 택시조합 및 개인택시 각 지부에서 접수한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이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이 적어 장시간 차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들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택시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전기택시 보급 차량>

/자료=서울시

제작사	차종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	보증 조건
현대	아이오닉EV	271km	38kWh	10년 20만km 보증
현대	코나EV	406km	64kWh	
기아	니로EV	385km	64kWh	
기아	쏘울 부스터EV	386km	64kWh	

서울싱크탱크협의회, 오늘 고령사회 정책 토론회

고령화 대비 서울시 지원방안 주제

서울시는 3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싱크탱크협의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싱크탱크협의회는 지난해 7월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이 발족한 기관이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서울시 지원방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의체 참여 기관장, 연구진, 관련 전문가, 시민 180여명이 고령친화 도시로 가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고 함께 정책을 고민한다.

우선 서울연구원, 서울의료원,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시 노인건

강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노인의 건강 현황과 환경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하고 건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등이 '고령친화 주택개조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노인의 거주 환경을 살펴보고 낙상사고를 줄일 수 있는 환경 개선 대안을 제안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비 새는 상가' 분쟁 해결 나선다

#. 마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비가 올 때마다 빗물받이 양동이를 설치하는 게 일이다. A씨는 매번 상가주인 B씨를 찾아가 조치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A씨가 가게 간판공사를 한 후 비가 새기 시작했다며 도리어 A씨에게 누수공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각각 누수전문가를 불러 진단을 했지만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었다. A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매출이 떨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6~7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상가건물 누수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 및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상가누수발생시 '서울시상가임대차 상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3인 1조로 구성된 누수 책임 확인 점검팀이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팀은 누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임

대차계약 내용 및 책임 소재와의 관계,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등을 검토·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상가건물 누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리할 것"이라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